



이국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의회 회장

정부의 합성수지 재질포장재 감량화지침(안)에 대하여

정부는 폐자원의 재활용촉진을 목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플라스틱용기류를 제조 판매하는 자에 대한 폐플라스틱재활용 의무량과 재질분류표시제를 의무화 하므로써 우리 중소기업합성수지 용기류 생산업체는 막대한 금형비(약 950억원)를 들여 금형을 새로 제작하는 등 이제까지 정부의 모든 재활용촉진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많은 양의 재활용 가능한 페프라스틱이 분리 배출 수거되므로써 재활용이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환경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제 1회용품, 라면 용기, 요크르트용기 및 식품 등 셋팅용 트레이, 그리고 EPS포장재 등을 재활용이 안되는 쪽으로 시 도에 홍보함으로써 분리수거만 되면 100%재활용이 가능한 이들 제품 등이 규격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어 우리조합에서는 별도로 수차 시 도 구청에 재활용 가능제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늘어나는 페프라스틱의 회수 재활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프라스틱재활용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의 페프라스틱재활용협의회 및 한국발포스틸렌재활용협의회 등 플라스틱관련 재활용단체에서는 업종별, 품목별로 체계적인 수거 및 재생처리사업(소각포함)을 위하여 정보교환 등 상호 협조체제하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사업계획을 마련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에서는 재활용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같이 페프라스틱의 재활용사업을 위하여 관련업계 스스로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환경부에서는 대체 할만한 포장재의 개발준비 기간도 없이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지침(안)'을 발표하여 일회용품, 비닐봉지, 도시락에 이어 또다시 사용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하려 하므로써 가뜰이나 원료가상승, 사용규제 등으로 일부 업체는 이미 부도를 내고 있고, 상당수의 업체

가 부도 일보직전에 있는 이때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금번 환경부의 포장재 감량화 대상품목인 계란 및 과일난좌, 가공식품 등의 완충트레이, 화장품 완구 인형의 셋팅용 트레이 및 기타 선물세트 등의 세팅용 트레이는 우선 100%재활용이 가능하고 소각시에도 오염이 안되는 재질(PS,PP)로 된 제품일 뿐만 아니라 오염이 안된 상태로 배출되므로 분리 수거만 제대로되면 회수 재활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사용규제조치보다 재활용위주의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식품 및 종합품의 셋팅용트레이는 상품의 품질유지, 단열성, 선도유지, 경량화, 안전운송 보관, 외관상의 미려, 상품가치성 및 수출제품의 고급화 등을 고려할때 플라스틱외의 다 대체품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컵라면용기의 경우도 재질이 PS(Poly Styrene)이므로 분리 수거만 이루어지면 재활용이나 소각시에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므로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PS라면용기의 사용규제를 실시하는 곳은 없다.

그런데 현재 대체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6월부터 전면 사용규제를 하려하고 있으니 어이없는 일이다.

환경 배출면에서도 종이 제품은 PS제품보다 대기중의 배출물이 1.8배나 많고, 폐수로의 배출도 2.2배로써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종이제품은 수지코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재활용도 PS용기보다 어려운 실정이며 환경 및 국가가 경제면에서도 종이 제품은 PS제품보다 자원의 소비량, 산림보호 측면, 에너지사용면, 제조원가면에서도 월등히 불리하다.

특히 라면은 서민층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가격인상을 강력 단속하고 있는 품목인데 종이로 대체시 PS보다 약 3배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여가 라면값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인바, 이것도 문제지만 라면값의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체품 개발도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라면 업계에서도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일년 후 100%대체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모순된 행정조치이다.

금번 규제대상 포장재의 전체 수요는 약 83,000톤을 전체 플라스틱발생량의 약 5.8%에 불과 규제효과가 미흡한 반면 생산업체는 약 650여개사로 많은 영세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한 실정이며, 같이 영향을 받을 250여개의 압출기, 성형기, 금형제조업체 등 관련사업의 피해까지를 감안한다면 그 피해액은 기존 시설폐기 약 6,500억원, Pulp Molding기 수입 약 8,000억원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다.

정부는 세계화 정책추진에 따른 대통령지시에 의거 모든 행정규제조치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있는 이때에 유독 환경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수행하므로써 이를 역행하고 있다.

포장재의 대체품개발은 많은 연구와 많은 문제해결의 실제 시험(Test)을 거쳐 시행되어야 하므로 상당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사용규제를 하지말고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많이 하느냐 하는 쪽으러가 정부가 정책방향을 설정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활용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단체인 한국플라스틱재활용협회와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등의 사업계획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